“광주·전남권에 자율주행 전용 정비거점 조성해야”

‘AI모빌리티 시범도시’ 광주 잠재력 충분

정진욱, 산업부 감사 분산형 생태계 촉구

광주·전남권에 자율주행 전용 정비 거점을 조성하면 지역 분산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광주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 상용화의 실증 중심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자율주행차 보관·충전·정비 등과 같은 자율주행 전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통상협상에서 자율주행차 상호인증 조항 도입을 검토해 달라”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 기업가치를 현실화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그는 “자율주행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이자 국가 기술주권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유사한 기술력을 가진 해외 기업들이 5-1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데 비해 국내 기업은 약 3천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해 자율주행 기업의 가치를 현실화하고 산업부는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펀드를 조성·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실증특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상용화는 단순히 차량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 체계, 전용 통신망, 인프라·운영(정비·충전·청소·재배치)체계까지 모두 포함되는 종합 산업생태계의 문제”라며 “한국은 현대차·통신 3사·대형 건설사 등 상용화 인프라를 가진 기업 기반이 있고 이들이 스타트업과 공동 R&D·공동 실증(PoC)·공동 조달 등 구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면 미·중과의 격차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미 FTA에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법규(FMVSS)만 충족해도 한국에서 연간 5만대까지 판매할 수 있는 상호인증 조항이 있다”며 “한국도 향후 FTA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RCEP 등) 협상에서 ‘한국 정부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는 일정 대수까지 상호인증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상호인증 조항을 협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진수 기자

APEC 경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하루 앞둔 26일 경북 경주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치한 외국인 관광객 환영 부스 관계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남 “‘사법부 싹’ 발언, 국민의힘 왜곡 유감”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 단호 대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해당 발언이 사법부 전체가 아닌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싹’을 의미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양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이 불법 계엄에 침묵한 점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을 9일 만에 파기한 점 ▲지귀연 판사가 ‘내란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한 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양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직후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론적,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는 사법개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러한 싹은 당연히 잘라내야 한다. 이것이 저의 양심이고 헌법적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민의힘 말처럼 사법부 비판을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개혁도 성찰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양 의원은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을 무시한 채 대통령 재판 가능성을 언급한 것부터가 삼권분립을 무시한 것”이라며 “단 9일 만에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파기한 것도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 삼권분립을 깨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이재명 방탄’,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상상력이자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양 의원은 “사법부는 독립돼야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독립돼서는 안된다”며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지속적인 감시와 개혁의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농협은행, 비농업인 대출로 수조원 손실

서삼석 “특수채권 4조↑ 설립 목적 훼손”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6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26만8천821건, 4조1천8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8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 불가능으로 회계상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액은 4천45억원(3만3천64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업인 대상 대출의 손실은 801건(2%), 184억원(5%)에 불과했으며, 비농업인 대출이 전체 손실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패션타운 복합시설 신축을 위해 2천700억원을 대출받은 A기업이 2024년 부도 처리되면서 1천60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다. 이는 기업 위주 대출이 조합원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야기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행의 성장 기반은 조합원과 농민의 자산에 있지만 실제 대출은 농업인보다 비농업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농협은행이 농민의 은행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비농업인 대출로 인한 대손상각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농협은행은 내부 리스크 관리와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조합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출 구조 개편과 부실채권 해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시, 고려인주민 지원 국비 1억 확보

2년 연속 재외동포청 공모 선정

광주시는 26일 “재외동포청 ‘2026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공모’에 ‘고려인주민 광주정착지원사업’이 선정돼 국비 1억1천67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려인주민 광주정착지원사업’은 광주지역 고려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 1억1천45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도 1억1천670만원을 확보, 2년 연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한국어 교육 ▲고려인 광주진료소 운영 ▲취업·체류·통역 등 종합 상담 ▲노인돌봄센터 운영 ▲고려방송 미디어센터 운영 ▲청소년문화센터·오케스트라 운영 ▲‘고려인의 날’ 행사 개최 등이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해 고려인 주민들을 위한 종합상담소·노인돌봄센터 운영,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변은진 기자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